

# 한국의 민주화와 대중의 심리적 정향

박 찬 욱\*

〈목 차〉

I. 서론	IV. 민주화에 대한 선호와 지지
II. 정치 민주화와 대중	V. 민주화 진행도에 대한 평가
III. 민주화의 의의와 개념인지	VI. 결론

## I. 서론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시기의 체제변화는 권위주의하의 자유화를 탈피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였다. 우선 노 대통령 자신부터 1979년말에 등장한 신군부세력의 핵심인물로서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후보의 분열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전의 권위주의 정치와의 단절을 위한 개혁에 전혀 적합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정치체제가 절차적 의미에서 규정되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점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1992년 12월의 대선으로 잡을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출현은 1961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후 심화되었던 권위주의를 종식시키는 문민정부의 탄생을 가져왔다. 또한 선거를 통한 대통령직의 교체를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공명한 선거과정을 거쳐 권력창출에 있어서 확고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초기 1년여 남짓동안 민주정치의 제도화를 향한 일련의 의미 있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음성적 정치자금수수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앞장서고, 금융실명제 도입을 결단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윤리 및 책임성 제고를 위

\*서울대, 정치학

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되었으며, 선거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주적 정치절차를 제도화하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공고화되지 못하는 단계(consolidating but unconsolidated)에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강화가 속제로 남아 있다. 집권당과 반대당간에 대등한 경쟁이 전개되고 권력이 정당간에 교체될 가능성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게 보인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의 철저한 보장, 그리고 사회세력간의 균형이 확보되는 다원주의의 구현은 모두 민주정치 공고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sup>(1)</sup>

이 글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말기 이후 지금의 김영삼 정부시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이 보여주는 심리적인 정향과 반응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기되고 해답이 모색되는 질문은 크게 세가지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일반시민들이 민주화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으며 그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사회배경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두번째 묶음의 질문은 일반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선호와 지지와 관련된다. 한국의 시민들은 과연 정치민주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가? 민주정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다시 권위주의 독재로 반전된다면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민주화 지지의 사회배경적 기반은 어떠한가?

셋째, 일반시민들이 체제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평가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몇가지 질문이 추구된다. 즉 그들은 정치의 민주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는가? 민주화 정도에 대한 기대에 비교해 볼 때 현실은 어떠한가?

(1) 노태우 정부시기의 민주화 정도에 관한 평가는 안창시,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정치학적 고찰," 안창시·진덕규(공편),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1992』(서울: 법문사, 근간예정)과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서울: 한길사, 1993), pp. 292-366 참조. 물론 이 두 필자는 비판적 입장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이전 단계인 '제한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최장집, 앞의 책, pp. 399-415를 참조. 한편 '이완된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손호철, "정치개혁의 한국적 모형: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1993. 11. 5) 참조.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시기와 비교하게 되면 현재의 민주화 정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현재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수준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배경요인에 비추어 어떤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가? 그리고 현재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가?

민주정치가 공고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권위주의 정치로 복귀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 선호, 지지 및 평가를 논의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보다 그 이후 공고화로 진전하는 단계에서 시민대중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다른 유형의 정치체제와는 크게 다르게 민주정치체제의 존속력은 시민들이 체제에 부여하는 정당성과 그들의 참여의사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반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심리적 정향의 체계인 정치문화가 안정적 민주정치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치적 인지, 선호 및 평가에서 나타나는 정치문화의 지배적 성격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어서 촉진 또는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Ⅱ. 정치 민주화와 대중

우선 이 연구의 설계로부터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과의 해석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중심되는 개념과 전제된 시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민주화에 관한 방대한 기존 연구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업적만을 언급할 것이다.<sup>(2)</sup>

이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 민주주의 개념을 최소주의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규정한다. 필자의 민주주의 개념은 정치제도와 절차에 국한시켜 정의되며 경제적 평등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포함하는 최대주의적 또는 실질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최소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실질적으로 규정되더라도 그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수용하지 않는다. 뒤에서 일반시민들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인지가 논의될 때에 정확성의 평가기준은 바로 최소주의적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될 것이다.

(2)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에 좋은 지침이 되는 논문들을 들자면 Levine, 1977/88; Collier and Norden, 1992; Kitschelt, 1992; Mainwaring, 1992; Valenzuela, 1992; Shin, 1993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은 슈페터(Schumpeter, 1950, 269-273), 다알(Dahl, 1971, 3-20) 등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다알은 현실의 민주정치체제를 다두제(polyarchy)로 명명하고 그 특징들을 열거한 바 있다. 그 특징들의 내용을 별로 손상시키지 않고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복수의 정당 및 후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펼친다. (2) 일반시민은 이러한 선거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을 행사한다. (3) 일반시민은 선거에서 당선되어 공무를 맡아 수행할 권리가 있다. (4) 일반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정보추구의 자유가 보장된다. (5)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정부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을 채택하였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8; Diamond, Lipset, and Linz, 1989, 6-9; Huntington, 1991, 5; Higley and Gunther, 1992, 2). 논의의 목적이 현실 정치체제의 비판이나 미래의 진보를 위한 처방이 아니라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경험적 서술과 설명이라면 절차적으로 정의된 민주주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 기준에 집착한다면 현실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거나 없으며 그 개념의 실증성이 문제시될 것이다.

물론 다알이 다두제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는 자유로운 경쟁, 포괄적인 참여와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에 이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론에 있어서도 더욱 최소주의적인 접근과 비교적 덜 최소주의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민주화 연구가들은 권위주의가 붕괴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민주주의로의 초기 이행단계와 이러한 문턱을 넘어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단계를 설정한다. 절차적 개념 가운데서도 보다 더 최소주의적인 접근이 초기 이행의 완료여부를 가늠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즉 일반시민들이 광범위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정당 및 후보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 선거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구성된다면 그 정치체제는 일단 초기의 이행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민주화 연구는 주로 민주주의로의 초기 이행을 많이 다루었던 반면 새로 또는 다시 출현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문제는 덜 논의하였다. 이 글의 입장은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의 탄생과 함께 민주화의 초기 이행단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된 관심은 아직 불안정한 민주주의가 앞으로 공고화되고 마침내 안정적 민주정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한다.

불안정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안정적 민주주의로 변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의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헌팅톤은(Huntington, 1991, 266-267)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집권한 정당이 권력을 다른 정당에 이양한 후 새롭게 권력자의 위치에 선 이 정당이 또다시 권력을 정당간에 이양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으로 본다. 즉 정당간 권력의 교체가 2회 발생하는 것을 민주정치 공고화의 시금석으로 삼는다. 선거절차에 주목하는 이 기준(two-turnover test)은 일견 충족하기에 용이할 것 같으나 꼭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민당이 탄생한 1955년 이후 시기를 보자. 일본에서 권력창출은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2회의 정당간 권력교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지 않다.

발렌주엘라(Valenzuela, 1992, 60-70)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을 토대로 민주주의 공고화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은 권위주의의 제도적 유산을 청산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발렌주엘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작동되는 것을 저해하는 과거의 왜곡된 제도화(perverse institutionalization)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곡된 제도화란 (1) 비민주적으로 형성된 후견적(tutelary) 권력집단의 존재, (2) 민주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유보영역(reserved domain)의 존재, (3)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차별(discrimination)의 존재, 그리고 (4) 정부구성에 있어서 자유선거가 아닌 대안적 방법의 존재이다.

일단 공정한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군부가 이러한 민주정부의 후견세력임을 자임한다면 이러한 체제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권한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군주, 고위 관료층, 자본가 계급 등의 위협으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유보된 정책영역이 있다면 이러한 체제도 공고화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선거제도가 의도적 조작을 통하여 특정세력을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엘리트나 대중이 군사 쿠데타 또는 봉기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교체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공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은 헌팅톤의 기준에 유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발렌주엘라가 규정한 바를 더욱 중시한다. 헌팅톤의 기준은 공고화 시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발렌주엘라의 개념은 공고화되지 못한 신생 민주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는 점에 있어서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헌팅톤과 발렌주엘라간의 입장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오직 선거만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절차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발렌주엘라가 말하는 왜곡된 제도화가 빨리 소멸, 제거될수록 선거를 통한 정당간 권력교체의 가능성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의 조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많다. 크게 나누면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의 두가지가 빈번하게 강조되어 왔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풍미하였던 근대화 이론이 경제발전의 수준과 민주주의 정치가 갖는 양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는 다이어몬드, 립셋, 그리고 린즈의 제3세계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공동저작(Diamond, Linz, and Lipset, 1990, 1-37)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주류 근대화 이론과 지적 전통을 달리하지만 계급 관계의 역사적 전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나 다른 체제의 출현을 논의한 무어의 연구(Moore, 1966)도 사회경제적 조건을 탐구한 것이다. 한편 시민 문화와 안정적 민주정치의 상합성을 강조한 알몬드나 버바의 정치문화론(Almond and Verba, 1963)이 두번째 부류의 주장을 대표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조건을 구명하고자 하는 이 모든 연구들은 그 내용상의 초점이 상이해도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민주정치의 기능적 요건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적 결정론 또는 기능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앞에서와 같은 이론적 입장보다는 생성론(genetic theories)에 주로 밑바탕을 두고 있다. 즉 민주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또는 제약조건 자체보다는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정치적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선택이 어떻게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그 결과로 초래하였는가를 추적하였다. 쉘보르스키(Przeworski, 1986; 1992)와 같은 학자가 이 점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며 디 팔마(Di Palma, 1990), 헌팅톤(Huntington, 1991) 등 그 밖의 유수한 민주화 이론가의 저작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쉽게 확인된다.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임혁백의 연구(1990) 또한 여기에 속한다.

생성론적 시각은 기능론적 시각에 비하여 훨씬 동태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성론은 구조적인 제약 아래 체제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쉽과 정치엘리트 내부의 상호작용 등의 정치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과 자율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민주화 연구에 공헌하게 되었다.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나는 초기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엘리트의 행위를 서술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일단 초기의 민주적 이행을 거쳐 공고화로 향한 체제의 문제와 이것의 해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기의 이행을 고찰할 때보다는 구조적 요인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기의 이행보다 공고화과정이 대체로 더욱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초기 이행과정에서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주어진 것, 즉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공고화 과정을 살펴볼 때에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고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선택을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간의 이행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며, 대중의 정치적 기대나 요구 또는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정치엘리트가 선택할 대안은 무엇이며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어서 정치문화적 조건을 다루고 있다. 정치문화는 일반시민들의 심리적 태도와 정향속에서 특징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과정의 중추적 행위자인 엘리트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기 이행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고화 과정에서도 정치엘리트의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치엘리트 내부에는 적어도 정치게임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민주정치가 공고화될 수 있다(Higley and Gunther, 1992, 7). 엘리트 사이의 절차적 합의는 권위주의 정치시기에 이루어진 왜곡된 제도화를 분쇄하고 비영합적(nonzero-sum) 게임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가치에 대한 엘리트 내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민주정치의 공고화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Valenzuela, 1992, 78-93).

그런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왜 대중의 심리적 정향을 문제시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민주주의는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에 기반을 두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태도, 신념 및 가치가 이 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일반시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체제보다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체제의 정당성은

시민들이 그 체제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신념 속에 내재한다. 민주주의는 그 결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의 악으로 수용될 때에만 유지될 것이며 그것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공고화된다(Linz, 1978, 16-17; Dahl, 1971, 129-132). 이와 달리 독재체제에서는 강제력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피치자가 부여하는 정당성은 자산이 될 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체제에 대한 정당성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려면 일반시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정당성의 신념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 생성되어 확산되지 않으면 권위주의로 복귀하려는 반민주운동이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시민들 사이에 민주적 정당성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군부 또는 다른 조직화된 세력의 반민주적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Mainwaring, 1992, 309-312).

민주적 절차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의 정부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을 상실할 때 정부와 더 나아가 민주체제 자체에 환멸(descencanto)을 느끼기 쉽다. 그렇게 되면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연민과 향수(authoritarian nostalgia)가 깊어지고 민주체제는 서서히 사멸(slow death)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Huntington, 1991, 255-261; O' Donnell, 1992, 19).

정부와 그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설령 약화되더라도 그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정부를 출현시킨 민주적 절차에는 회의를 갖지 않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다. 일반시민이 체제와 정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하여 긴요한 것이다. 프랑코 사후에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경우가 이를 입증한다. 프랑코 치하의 말기에 스페인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정부의 정책수행실적은 일반시민들에게 프랑코 말기에 비하여 나아졌다고 평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민의 다수는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와 신봉의 수준에 있어서 향상을 보인 것이다. 스페인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와 같이 일반시민 수준에서 발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신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McDonough, Barnes, and Pina, 1986).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일반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민주정치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예측가능하며 널리 수용되는 통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반영한



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지는 민주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의 효과적 정책수행과 실질적 혜택에 비추어 민주주의의 개념을 파악하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공고화되지 않은 민주체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민주정부가 권위주의하의 정부보다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있어서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다. 특정 국가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중족갈등,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대규모 외채와 만성적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일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국의 일반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선호하며 지지하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민주적 헌신, 민주주의를 보존하려는 의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곳에서 공고화된 민주정치가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도 따져본다. 민주화에 대한 선호와 평가는 곧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수준으로 성장하였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민주적 정당성 외에도 정치문화론자들은 안정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신념과 가치를 강조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위축되었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시 복원된다. 일반시민들이 확대된 참여공간을 활용하여 요구를 표출하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반대되는 세력, 정당 및 가치에 대한 관용과 타협의 의지,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도 민주적 정치문화의 요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Dahl, 1989, 262; Diamond, Linz, and Lipset, 1990, 1-37; Inglehart, 1990, 3-48; Gibson, Duch, and Tedin, 1992).

### Ⅲ. 민주화의 의미와 개념인지

일반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태도와 정향을 논의하는 이 연구의 주요 자료는 1993년 11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다단계 확률표집방법에 의하여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이 선정되었으며 표본의 규모는 1,198명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한국의 시민들이 정치의 민주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를 밝혀본다. 일반시민들에게 과연 정치 민주화라는 국가목표가 다른 어떤 목표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가? 1960년대 초 이래 역대 권위주의 정부가 가장 먼저 앞세우고 추진해온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이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세력들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정부의 효과

성을 제고하여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려 하였다. 물론 경제발전의 목표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소홀히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정부시기에 다소 둔화된 경제성장의 속도를 다시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김영삼 정부는 그 어느 시기의 정부보다 민주정치 공고화를 위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국가목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국가목표로서의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이러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9.2%가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24.5%이었다. 경제발전을 민주화보다 분명하게 덜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26.3%에 불과하였다(〈표 1〉). 민주주의로 이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응답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일반시민 가운데는 민주화 우선론자보다 경제발전 제일주의자가 훨씬 많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만약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머지 않아 전개된다면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민주화의 희생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좋게 된다면 민주화의 추진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화 추진 과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토대로 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의 내용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민주정치발전의 결과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구성되었다. 즉 “사람들은 민주화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래의 항목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

〈표 1〉 국가목표로서의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간의 상대적 중요성

(%)

항목	응답비율
민주화 더 중요하다	26.3
경제발전 더 중요하다	49.2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말할 수 없다	24.5
계	100.0
사례수	1,198

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서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이다. <표 2>는 이 질문의 각 응답항목이 민주정치발전에 중요하다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민주정치발전에 중요하다는 반응은 전체 응답자의 71.5%였다. 그 다음으로 60% 이상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얻은 항목은 국민들의 경제생활보장(66.1%), 빈부격차의 해소(64.3%), 공평한 법제도(61.9%)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중의 정치참여(42.4%),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42.2%), 정치적 자유의 확대(39.7%), 남녀평등(39.0%)에서는 각각 전체 응답자의 50% 이하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표 2>의 질문과 내용은 동일하되 그 형식이 다른 질문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께서서는 다음의 항목중에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골라 답하여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된 응답항목 가운데 대중의 정치참여와 남녀평등은 응답자들을 덜 번거롭게 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표3>에 의하면 국민들의 경제생활 보장(24.6%)이 가장 많은 빈도로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경제발전(23.4%), 공평한 법제도(20.9%), 빈부격차의 해소(16.1%)가 빈번히 지적된 항목들이다. 이에 비하여 정치적 자유의 확대(10.3%)와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4.7%)은 민주정치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와 <표 3>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의 일반시민들이 민주화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고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 혜택이다. 경제의 성장과 물질적 생활의 향상,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빈부격차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기보

<표 2> 민주정치발전에 중요한지의 여부

(%)	
항목	응답비율
국가의 경제발전	71.5
국민들의 경제생활보장	66.1
빈부격차의 해소	64.3
공평한 법제도	61.9
대중의 정치참여	42.4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	42.2
정치적 자유의 확대	39.7
남녀평등	39.0

※ 각 항목의 응답사례수는 1,198.

〈표 3〉 민주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

	(%)
항목	응답비율
국민들의 경제생활보장	24.6
국가의 경제발전	23.4
공평한 법제도	20.9
빈부격차의 해소	16.1
정치적 자유의 확대	10.3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	4.7
계	100.0
사례수	1,198

다는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통해서 초래되는 혜택이다. 경제적인 것 말고는 공평한 법제도의 시행이 민주적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많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다수 시민들은 민주적 정치발전이라고 하면 정치절차의 민주화보다는 경제적 발전과 향상을 중시하고 기대한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정치민주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절차의 성격이 아니라 정부가 산출한 정책의 성과에 비추어 민주주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기대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음을 말해준다.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은 최소한의 필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적 개념의 민주주의가 실현됨이 없이 확대된 실질적 의미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한국의 일반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쌍두마차의 민주적 가치 가운데서도 평등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경제적 형평성이나 법적 평등 다음에야 자유와 참여의 권리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발전과 평등을 명분삼아 확립된 정치절차나 시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처사를 많은 수의 시민들이 묵과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가 민주화된다고 밥먹여 주는가” 하는 태도가 상당수 시민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여 있다.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인지의 수준을 측정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 사회집단에서 그 수준이 가장 낮은지 또는 높은지를 확인하여 보기로 하자. 〈표 2〉의 8개 응답항목 가운데 공평한 법제도, 대중의 정치참여,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 정치적 자유의 확대 등 4개 항목은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한 응답을 1점, 그렇지 않은 응답에 0점을 부여하여 0점부터 4점에 이르는 인지수준의 척도를 구성하여 보았다. 〈표 4〉를 보면 척도점수가 0인 사람들, 즉 민주화의 최소주의적 개념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17.1%에 이른다. 이러한 사람

〈표 4〉 사회배경변수별 정치민주화의 개념인지수준

(%)							
변수	0	1	2	3	4	평균점수	사례수
전체	17.1	27.5	24.7	13.2	17.4	1.9	1,198
성별**							
남	15.8	25.8	23.1	14.5	20.7	2.0	627
여	18.6	29.4	26.4	11.7	13.8	1.7	571
연령**							
20대	9.5	22.8	28.4	13.4	25.9	2.2	359
30대	14.5	29.2	26.8	15.0	14.5	1.9	366
40대	23.7	31.0	21.6	12.1	11.6	1.6	232
50대	25.3	28.2	19.5	12.1	14.9	1.6	174
60대	27.7	30.8	18.5	9.2	13.8	1.5	65
학력**							
국졸이하	38.7	27.0	16.1	7.3	10.9	1.3	137
중	21.8	44.3	18.4	6.3	9.2	1.4	174
고	17.2	28.7	26.5	13.2	14.3	1.8	453
초대	7.8	25.2	27.0	20.0	20.0	2.2	115
대학이상	8.2	18.0	28.4	17.0	28.4	2.4	317
가구소득(월)**							
49만원 이하	23.5	35.3	17.6	12.9	10.6	1.5	85
50-99만원	18.4	30.7	23.9	12.6	15.3	1.8	261
100-149만원	17.6	30.1	23.4	10.7	18.2	1.8	346
150-199만원	16.7	27.8	24.5	13.0	18.1	1.9	216
200만원이상	8.5	18.8	34.3	16.9	21.6	2.2	213
본인직업**							
전문관리직	11.2	20.6	30.6	14.1	23.5	2.2	170
사무직	14.5	21.4	30.3	15.2	18.6	2.0	145
판매서비스직	19.7	31.7	22.9	13.8	11.9	1.7	218
생산직	16.1	27.6	26.4	12.6	17.2	1.9	87
농어민	27.4	30.7	19.6	7.3	15.1	1.5	179
학생	5.4	17.4	23.9	18.5	34.8	2.6	92
주부	18.3	34.5	23.8	13.2	10.2	1.6	235
무직·기타	14.5	27.3	18.2	12.7	27.3	2.1	55
도시화**							
대도시	13.1	25.7	26.4	15.3	19.6	2.0	588
중소도시	15.0	28.6	25.4	12.9	18.1	1.9	287
읍면이하	26.3	29.8	21.3	9.4	13.2	1.5	319
거주지역**							
서울	14.3	22.3	25.0	15.7	22.7	2.1	300
인천·경기	23.9	24.4	24.9	14.7	12.2	1.7	197
강원	28.6	26.5	26.5	6.1	12.2	1.5	49
충북	22.5	40.0	17.5	7.5	12.5	1.5	40
대전·충남	12.5	30.7	27.3	17.0	12.5	1.9	88
전북	19.4	32.3	16.1	14.5	17.7	1.8	62
광주·전라	17.9	22.6	26.4	8.5	24.5	2.0	106
대구·경북	16.4	30.1	19.2	13.7	20.5	1.9	146
부산·경남	12.4	33.8	29.5	11.0	13.3	1.8	210

\*\* p < .01: 각 형질 백분율의 합계는 100.0이 된다.

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들이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에 좌우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민주화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17.4%를 구성한다. 그밖에 대체로 낮은 수준(1점)의 인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27.5%, 중간 수준(2점)이 24.7%, 대체로 높은 수준(3점)이 13.2%이었다. 평균적인 한국 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인지수준은 4점 만점에서 약 2점 정도이다. 이러한 인지수준은 민주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를 크게 촉진하는 요인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증진시킬 것이 요구된다.

〈표 4〉에서 보면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직업, 거주지역의 도시화, 거주지역의 행정구역 등 모든 사회배경변수가 민주화 인지수준과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민주화의 인지수준이 극히 낮은 사람들은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50대 이후, 학력별로는 국졸, 소득수준별로는 최저 소득층, 직업별로는 농어민층, 도시화 정도에 있어서는 읍면이하의 농촌, 그리고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인지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들은 남자, 20대, 초대 이상, 최고 소득층, 학생과 전문관리직, 대도시, 그리고 광주·전라와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다. 성별, 세대별, 학력수준별, 계층별, 및 지역간의 차이가 민주화에 대한 인지수준에 비추어 역력히 드러난다. 젊은 층의 인지수준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 고무적이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도시화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 시민의 정치적 인지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배경별 집단간의 차이는 민주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집단의 영향력의 차이와 정치적 성층화를 시사해 주고 있다.

#### Ⅳ. 민주화에 대한 선호와 지지

한국의 시민들은 과연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민주화에 대한 선호를 우선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자. 조사에서는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주장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알아 보았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민주주의는 무질서를 초래할 수

〈표 5〉 정치민주화에 대한 선호

항목					(%)
	전적찬성	약간찬성	약간반대	전적반대	사례수
민주주의는 무질서를 초래하므로 위험하다	7.7	23.9	28.7	39.6	1,153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	2.4	7.2	17.8	72.6	1,146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	2.5	5.5	20.1	82.0	1,152

※ 각 횡렬 백분율의 합계는 100.0이 된다.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8%가 반대를 표명하였다. 여기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2% 정도이다. 민주주의와 무질서를 연결시키는 견해도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만약에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것이다” 또는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는 반응, 특히 강력히 반대하는 태도가 압도적이다. 이 두 문항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이 각각 적어도 90%나 된다. 군부독재와 단일정당제를 아주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에 비추어 한국의 시민들의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좀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검토함으로써 정치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지지수준을 밝혀본다. “오늘날 선생님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적극 반대(1)로부터 적극 지지(10)에 이르는 10점 척도에 따라 응답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 이상은 7점 이상의 지지태도를 표명하였다(〈표 6〉 참조).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7.6임에 비추어 김영삼 정부시기에 한국 시민들 다수가 열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년 전인 노태우 정부 말기에 실시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도 동일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점수 7 이상을 보면 가장 적극적인 지지(점수 10)의 응답비율이 이번 조사보다 많았지만 그외에는 응답비율이 모두 적어 약 65%가 민주화를 지지했던 것이다(Shin and Chey, 1992 참조). 따라서 2년 사이에 정치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에 대한 선호와 지지태도에 관련된 앞의 질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의 의사를 알아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집권당의

〈표 6〉 정치민주화에 대한 지지

(%)

지시수준	1993.11 조사	1991.11 조사
적극반대 1	0.4	1.9
2	0.7	0.9
3	1.3	3.3
4	2.3	4.6
5	9.2	13.7
6	11.2	10.9
7	19.6	13.0
8	23.0	16.0
9	12.8	8.2
적극지지 10	19.5	27.4
계	100.0	100.0
평균점수	7.6	7.3
사례수	1,192	1,185

권력남용이나 군부의 정치개입 등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앞으로 실패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하여 보았다.

민주주의를 좋아하며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민주화가 후퇴할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의지가 있는가를 문제삼았다. 응답자의 46%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유보적 응답은 33% 정도,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2년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우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성향을 보인 응답이 17% 정도 줄어든 반면 유보적인 응답은 15% 정도 늘었다. 이것은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6월에 절정을 이루었던 민주화 투쟁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의가 식은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군부개입이나 다른 형태의 민주화 반전 가능성이 줄었다는 시민들의 느낌과 판단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2년전 조사와 전혀 다른 점은 민주화를 위한 행동의 의지가 전혀 없는 응답자들이 여전히 22%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적어도 5분의 1 정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에게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의 신념이 확산되는 것이 지속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시민층의 적어도 4분의 3 정도는 정치민주화를 선호하고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층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만약에 민주화가 후퇴한다면 그 회복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표 7〉 민주화 실패시에 민주회복활동 참여의사

항목	%	
	1993. 11 조사	1991. 11 조사
참여하지 않겠다	8.6	2.9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3.4	19.4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어 모르겠다	32.5	14.5
참여할 것이다	28.3	43.6
참여하겠다	17.3	19.5
계	100.0	100.0
사례수	1,192	1,183

것은 시민들 사이에 민주화 선호와 지지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사회배경변수와 관련되어 발견되어지는가를 논의해 보자.

〈표 8〉에 의하면 고려된 모든 독립변수가 .01의 유의수준에서 민주화 지지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비교적 높은 빈도의 응답이 주어진 지지(7, 8점)와 적극 지지(9, 10점)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평균점수를 감안하여 어떤 집단에서 민주화에 대한 지지자, 특히 적극적인 지지자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가를 따져 보자. 여성보다는 남성이운데 민주화 지지자가 많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연령집단에서보다 가장 적은 비율로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연령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가 아니다. 학력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세 범주(초·중·고)의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초대, 대학이상)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고학력과 민주화에 대한 지지태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최저소득층에서 민주화 지지의 태도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소득층 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직업유형별 집단 가운데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학생층이 민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농어민과 주부들 사이에 적극적인 민주화 지지자를 찾기가 가장 어렵다. 다른 직업집단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주지역별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북주민 가운데 민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이 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표 8〉 사회배경변수별 민주화 지지수준

(%)

변수	적극반대 (1, 2)	반대 (3, 4)	중간 (5, 6)	지지 (7, 8)	적극지지 (9, 10)	평균점수	사례수
전체	1.1	3.6	20.5	42.6	32.2	7.6	1,192
성별**							
남	1.0	3.0	16.6	43.5	35.9	7.8	627
여	1.2	7.2	24.8	41.6	28.1	7.4	565
연령**							
20대	0.8	3.1	19.0	43.6	33.5	7.7	358
30대	1.9	5.7	19.7	39.6	33.1	7.5	366
40대	0.9	3.5	20.9	46.5	28.3	7.5	230
50대	0.6	0.6	23.8	37.2	37.8	7.8	172
60대	0.0	3.1	23.4	54.7	18.8	7.4	64
학력**							
국졸이하	0.0	1.5	31.6	39.1	27.8	7.4	133
중	1.1	6.9	20.1	41.4	30.5	7.4	174
고	1.3	3.5	21.2	43.9	30.0	7.5	453
초대	0.0	0.9	16.7	49.1	33.3	7.9	114
대학이상	1.6	3.8	16.5	40.8	37.3	7.8	316
가구소득(월)**							
49만원 이하	4.8	4.8	32.1	31.0	27.4	7.0	84
50-99만원	0.4	4.2	17.4	46.7	31.3	7.6	259
100-149만원	0.6	3.5	20.8	44.2	30.9	7.6	346
150-199만원	2.3	3.2	18.5	42.6	33.3	7.6	216
200만원이상	0.5	4.3	20.4	42.7	32.2	7.6	211
본인직업**							
전문관리직	3.0	3.0	15.4	40.8	37.9	7.8	169
사무직	0.7	1.4	17.2	49.7	31.0	7.8	145
판매서비스직	0.0	3.2	21.6	42.2	33.0	7.8	218
생산직	1.1	3.4	12.6	48.3	34.5	7.8	87
농어민	0.6	4.5	25.6	40.3	29.0	7.4	176
학생	1.1	3.3	16.3	38.0	41.3	7.9	92
주부	1.7	4.3	26.2	40.8	27.0	7.3	233
무직·기타	0.0	9.1	16.4	50.9	23.6	7.4	55
도시화**							
대도시	1.2	3.4	18.6	42.1	34.8	7.7	587
중소도시	1.7	4.2	19.9	41.8	32.4	7.5	287
읍면이하	0.3	3.5	24.8	43.9	27.4	7.4	314
거주지역**							
서울	0.3	3.3	19.7	38.8	37.8	7.8	299
인천·경기	1.5	4.1	16.8	47.2	30.5	7.6	197
강원	2.0	4.1	18.4	32.7	42.9	7.6	49
충북	0.0	0.0	12.5	55.0	32.5	8.0	40
대전·충남	1.1	2.3	18.2	61.4	17.0	7.3	88
전북	1.7	3.4	47.5	30.5	16.9	6.7	59
광주·전라	1.0	4.8	21.9	37.1	35.2	7.6	105
대구·경북	1.4	6.2	24.8	39.3	28.3	7.3	145
부산·경남	1.4	2.4	16.7	44.3	35.2	7.8	210

\*\* p &lt; .01: 각 횡렬 백분율의 합계는 100.0이 된다.

## V. 민주화 진행도에 대한 평가

시민들이 현재의 민주화 정도를, 자신들의 기대에 비추어 또한 과거의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시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민들은 과연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체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 또는 불만족도는 어떠한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완전독재(1점)로부터 완전민주(10점)까지 10단계로 민주화정도를 평가하였다. <표 9>에서와 같이 현실의 체제가 독재(1~4점)라는 평가는 불과 9%에 불과하다. 독재와 민주 중간(5~6점)으로 보는 응답자가 33%, 그리고 민주(7~10점)라고 보는 응답자는 58%에 달한다. 시민들의 다수는 한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백히 독재라고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 전체의 3분의 1 정도는 과도기적인 체제로 파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는 “오늘날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민주화되기를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현재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주화 진행의 정도를 살펴보자. 예상대로 현재의 정치체제가 독재에 머물기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에도 못미치고 있다. 압도적 다수인 90% 정도는 체제변화의 성격이 확실한 민주화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실의 민주화 진행도에 대한

&lt;표 9&gt; 민주화 진행도: 김영삼 정부시기

		(%)	
진행도		현실	기대
완전독재	1	0.5	0.1
	2	0.4	0.3
	3	2.8	0.3
	4	4.8	0.8
	5	13.3	2.8
	6	19.9	4.6
	7	29.3	12.1
	8	19.7	26.6
	9	7.2	29.1
완전민주	10	2.1	23.3
계		100.0	100.0
평균점수		6.6	8.4
사례수		1,188	1,186

평가점수의 평균이 6.6인데 기대한 민주화 점수의 평균은 8.4이다. 시민들의 다수는 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보는 편이나 민주화가 지금보다는 1~2단계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 정도를 평가하는 동일한 척도를 김영삼 정부 이전의 시기에 적용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체제에 대하여 독재라는 응답은 대체로 42%, 과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가 비슷하게 42%, 그리고 나머지 16%만이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체제에 대한 응답은 독재 70%, 중간형태 23%, 그리고 민주주의는 단지 7%이었다. 시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하의 정치체제는 대체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체제는 독재,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의 체제는 독재를 탈피하지 못한 이행체제이었다. 평균점수는 세 시기를 연속적으로 볼 때 3.6, 4.9, 6.6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가 진척되어온 것으로 평가한다. 시민들이 보기에 한국의 정치체제는 민주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어서 당시에 민주화 정도를 얼마만큼 기대했는가 하는 물음도 주어졌다. 응답자의 11%가 독재를, 38%가 이행체제를, 그리고 약 절반인 51%가 민주주의를 기대하였다. 응답자 다수는 당시 체제를 독재라고 판단하지만 민주정치를 기대하였다. 물론 당시에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매우 컸다. 대체로 10단계 가운데 3단계 정도 현실보다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진전된 체제를 원했다.

〈표 9〉와 〈표 10〉에 이미 제시된 자료를 좀더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표 10〉 민주화 진행도: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시기

(%)

진행도	노정부: 현실	전정부: 현실	전정부: 기대
완전독재 1	2.1	13.2	0.7
2	5.7	18.2	1.7
3	14.7	23.3	3.5
4	19.2	15.6	4.8
5	24.6	16.6	19.8
6	17.9	6.1	18.1
7	9.6	4.4	21.0
8	4.0	1.8	14.9
9	1.0	0.2	5.7
완전민주 10	1.2	0.8	9.9
계	100.0	100.0	100.0
평균점수	4.9	3.6	6.6
사례수	1,193	1,189	1,168

한다. <표 11>은 현재의 민주화 정도에 부여한 점수에서 전두환 또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점수를 빼서 체제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보, 정체, 아니면 퇴보했다고 평가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두환 정부시기와 비교하면 퇴보했다는 응답은 3%로 극히 적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다른 없다는 평가도 약 7%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나머지 90%는 진보했다고 보는데 이들의 다수가 3단계 이상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퇴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5%, 정체로 보는 응답자는 11%로 역시 84%의 다수가 진보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대체로 2단계 정도로 민주화가 진전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군부권위주의 정치가 극도로 심화되었던 전두환 정부시기와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선 김영삼 정부시기를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는 각도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앞서의 분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전정부 시기에 더 심하였다. 현실이 기대보다는 낮다거나 현실이 기대하던 바대로라는 평가는 불만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반응이다. 전정부 시기에 13% 정도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87%는 불만의 소지가 컸는데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는 현실이 기대에 아주 못미쳤다(5단계 이상의 차이)라고 하였다. 한편 현 시기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비교적 적은 응답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20%로 나타난다. 그런데 나머지 80%는 여전히 다소라도 현실과 기대간의 괴리를 말하고 있다. 다만 극심한 불만의 가능성이 있는 응답(5단계 이상의 차이)은 응답자의 6%에 불과하다. 예상하던 바와 같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체제에 대한 인식이 호전된 것이 분명하다.

<표 11> 김영삼 정부하의 민주화 진행도: 이전 정부와의 비교

(%)

진행도	전정부 기준	노정부 기준
퇴보 -1 이하	3.0	4.5
정체 0	7.3	10.8
진보		
최소 1	11.5	28.1
2	15.0	28.1
3	20.1	15.8
4	19.9	7.8
최대 5 이상	23.1	5.1
계	100.0	100.0
평균점수	3.1	1.8
사례수	1,183	1,187

민주화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도 측정하였다. 질문은 “선생님께서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이었다. 1993년 11월의 조사에서는 불만을 가진 응답(1~4점)이 16%, 중간정도(5~6점)가 39%,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7~10점)은 55%로 나타났다(〈표 13〉). 과반수 이상의 시민은 민주화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다만 그 만족의 강도는 약한 것임이 지적되어야 한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겨우 만족하는 정도의 6.2로 계산된다. 동일한 질

〈표 12〉 민주화 진행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

차이내용	전두환 정부시기	김영삼 정부시기
현실 > 기대 -1 이하	5.9	5.1
현실 = 기대 0	6.8	14.8
현실 < 기대		
최소 1	10.8	25.9
2	18.6	26.5
3	19.4	15.6
4	14.9	6.4
최대 5 이상	23.5	5.7
계	100.0	100.0
평균점수	3.0	1.8
사례수	1,164	1,180

〈표 13〉 민주화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	1993.11 조사	1991.11 조사
전적불만 1	1.3	7.0
2	1.1	6.3
3	5.8	11.0
4	7.4	18.6
5	19.9	22.1
6	18.9	15.4
7	21.3	10.7
8	15.7	6.3
9	5.3	1.5
전적만족 10	3.4	1.2
계	100.0	100.0
평균점수	6.2	4.8
사례수	1,193	1,183

문이 1991년의 11월 조사에서도 포함되었다. 지난 2년 동안에 체제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당시에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43%로 높았다. 중간정도가 37%, 그리고 만족하는 응답은 가장 낮아 20%이었다(Shin and Chey, 1992). 불과 2년 사이에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는 민주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따라서 만족도 또한 평균 4.8점에서 6.2점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이것은 과거와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결론이며 현재의 만족도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현재의 체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표 14>와 같이 응답자의 약 5분의 4가 민주화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머지 5분의 1은 이미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어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대다수는 민주화가 부단히 진척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체제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는 어떤 집단에서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가? <표 15>는 사회배경변수별 하위집단간 기대와 현실의 차이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분할표 분석의 경우에 .01의 유의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는 학력과 거주지역뿐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호남과 서울에서 이러한 괴리를 비교적 크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충북이나 강원지역에서 그러한 괴리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이것은 정치성향의 진보성 또는 보수성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유의수준을 .05로 다소 완화하자면 연령, 본인 직업, 도시화도 의미있는 독립변수적 효과를 갖고 있다. 젊을수록, 다른 어느 직업유형보다 학생과 생산직 근로자 집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편이다.

<표 14> 지속적인 민주화 진행의 필요성

항목	응답비율
지금보다 훨씬 덜 진행되어야	0.5
약간 덜 진행되어야	4.0
적당하다/모르겠다	16.1
약간 더 진행되어야	26.0
더 많이 진행되어야	53.4
계	100.0
사례수	1,196

〈표 16〉은 〈표 15〉의 경우와 상반된 측면을 보여주지만 결국 동일한 문제에 관련된다.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민주화 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단선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학력층은 다른 학력집단보다 만족도가 낮다. 소득계층별로는 중간수준에서 만족도가 높고 양극의 집단에서 만족도가 낮다. 직업유형별로는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농어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거주지역의 차이도 현저하여 충북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가장 낮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상승한다. 〈표 15〉와 〈표 16〉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면 지역별, 학력별 차이에 가장 주목하게 된다. 충북에서 두드러지게 현실안주적인 인식을 발견하게 되며 호남에서 현저한 불만의 소지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치성향의 보수와 진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지태도와도 관련지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실과 기대간의 괴리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며 따라서 불만이 가장 많다.

〈표 15〉 사회배경변수별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변수	점수 (기대-현실)	사례수	변수	점수 (기대-현실)	사례수	
전체	1.8	1,180	본인직업*			
성별			전문관리직	1.9	168	
			사무직	1.6	144	
남	1.7	623	판매서비스직	1.6	214	
			생산직	2.2	86	
여	1.8	557	농어민	1.6	174	
			학생	2.3	91	
연령*			주부	1.5	231	
	20대	2.1	355	무직·기타	1.8	55
	30대	1.7	363	도시화*		
	40대	1.5	227	대도시	1.9	583
	50대	1.5	172	중소도시	1.5	284
	60대	1.4	61	읍면이하	1.7	309
학력**			거주지역**			
	국졸이하	1.5	130	서울	2.0	297
	중	1.4	172	인천·경기	1.5	195
	고	1.6	448	강원	1.4	48
	초대	1.9	115	충북	1.0	40
	대학이상	2.2	313	대전·충남	1.5	88
가구소득(월)			전북	2.3	59	
	49만원이하	1.5	83	광주·전남	2.2	103
	50-99만원	1.8	258	대구·경북	1.5	142
	100-149만원	1.7	343	부산·경남	1.9	208
	150-199만원	1.7	213			
	200만원이상	1.9	210			

\*\*p < .01(교차분할표 분석); \*p < .05.



〈표 16〉 사회배경변수별 민주화에 대한 만족도

(%)

변수	아주불만 (1, 2)	불만 (3, 4)	중간 (5, 6)	만족 (7, 8)	아주만족 (9, 10)	평균점수	사례수
전체	2.3	13.2	38.8	37.0	8.7	6.2	1,193
성별							
남	2.1	12.9	35.6	40.3	9.1	6.3	626
여	2.6	13.4	42.3	33.3	8.3	6.1	567
연령*							
20대	2.5	18.2	38.0	37.4	3.9	5.9	358
30대	2.2	13.7	39.1	36.1	9.0	6.2	366
40대	2.6	7.8	41.6	35.9	12.1	6.4	231
50대	1.7	10.3	37.9	37.9	12.1	6.5	174
60대	3.2	8.1	35.5	40.3	12.9	6.5	62
학력**							
국졸이하	1.5	8.2	44.0	29.1	17.2	6.5	134
중	4.0	12.1	36.8	32.8	14.4	6.4	174
고	2.2	9.5	41.6	39.8	6.9	6.3	452
초대	0.0	11.3	35.7	44.3	8.7	6.5	115
대학이상	2.8	21.8	35.1	35.4	4.7	5.8	316
가구소득(월)**							
49만원 이하	7.1	15.3	40.0	22.4	15.3	6.0	85
50-99만원	1.5	11.5	46.2	31.9	8.8	6.2	260
100-149만원	1.4	10.1	36.7	42.5	9.2	6.4	346
150-199만원	1.9	14.4	32.9	41.2	9.7	6.3	216
200만원이상	1.9	18.0	39.8	34.6	5.7	6.0	211
본인직업**							
전문관리직	3.0	16.0	37.3	37.3	6.5	6.0	169
사무직	0.7	16.6	33.8	40.7	8.3	6.2	145
판매서비스직	1.8	12.0	34.1	42.9	9.2	6.4	217
생산직	5.7	6.9	42.5	37.9	6.9	6.1	87
농어민	1.7	9.7	42.6	34.7	11.4	6.3	176
학생	0.0	25.0	31.5	41.3	2.2	5.9	92
주부	3.8	10.2	45.5	29.4	11.1	6.1	235
무직·기타	1.8	14.5	36.4	38.2	9.1	6.3	55
도시화**							
대도시	1.9	15.3	38.8	35.7	8.3	6.1	588
중소도시	3.9	11.6	37.5	37.2	9.8	6.2	285
읍면이하	1.9	10.8	40.2	38.6	8.5	6.3	316
거주지역**							
서울	1.0	14.0	42.7	34.3	23.1	6.2	300
인천·경기	3.6	9.2	38.3	41.8	7.1	6.3	196
강원	0.0	18.4	30.6	30.6	20.4	6.5	49
충북	2.5	7.5	35.0	35.0	20.0	6.8	40
대전·충남	1.1	6.8	26.1	56.8	9.1	6.8	88
전북	8.1	22.6	50.0	19.4	0.0	5.0	62
광주·전라	1.9	17.3	32.7	43.3	4.8	6.0	104
대구·경북	2.8	15.2	38.6	32.4	11.0	6.1	145
부산·경남	2.4	12.0	41.6	34.9	9.1	6.2	209

\*\* p < .01; \* p < .05; 각 횡렬 백분율의 합계는 100.0이 된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일별하면 시민들은 정치체제가 아직 민주주의로 진입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물론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간극도 여전히 컸다. 그리고 민주화 만족도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였다(Shin and Chey, 1992; 신도철·최명, 1993; 최명·신도철, 1993). 그런데 2년 뒤인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어서 시민들은 현재의 체제가 민주화의 문턱을 분명히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다소 적게 인식된다. 하지만 민주화 진행도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단한 민주화 추진의 필요성이 여전히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 만족도의 사회배경변수별 차이 역시 유사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 Ⅶ. 결론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 초기에 실시한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태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일반시민 10명 가운데 적어도 2명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최소한의 핵심내용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절차와 관련시켜 민주주의를 개념화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성장이나 형평적 소득분배 등을 중심으로 민주정치의 중심내용을 인지한다. 정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없이 표명되는 민주주의 선호나 지지태도는 철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만일 경제발전이나 평등실현을 내세워 적법한 정치절차나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처사가 발생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 10명 가운데 7, 8명 정도는 민주화를 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말기의 경우와 비교하면 민주화 지지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런데 민주화에 대한 단순한 선호와 지지를 넘어서 민주화가 역전되면 민주회복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절반쯤 된다. 한편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즉 이들에게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신념을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아직도 3명 정도는 독재를 벗어나는 과도기 체제라고 보고 있다. 과거의 전두환 정부 시기는 독재체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과도적 이행체제라고 평가한 바에 비하면 현재 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호전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없다. 압도적 다수는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인지, 선호 및 평가에 있어서 시민들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은 민주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고, 지지태도가 뚜렷하지만 현재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앞에서의 조사결과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시민대중의 정치적 태도가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시민의 인지적, 감정적 및 평가적 정향이 민주정치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결과가 이와 같이 비판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시민이 정치민주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정치가 공고화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결국 정치엘리트의 각별한 노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정향이 왜곡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 참고문헌

길승흠

1993 "김영삼 개혁과 정치세력의 재편," 한국정치학회학술발표논문 (11.5).

박종민

1993 "개혁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학술발표논문 (11.5).

손호철

1993 "정치개혁의 한국적 모형: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학술발표논문 (11.5).

신도철·김광웅·최명·박찬욱

1990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서울: 서울대출판부.

신도철·최명

1993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지지의 성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pp. 137-160.

안청시

1994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정치학적 고찰," 안청시·진덕규 (공편),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1992』, 서울: 법문사.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분석," 안청시 (편), 『한국정치경제론』, 서울:

법문사, pp. 431-468.

최명 · 신도철

1993 "한국의 민주화: 일반대중의 인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3호, pp. 127-146.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llier, David, and Deborah Norden

1992 "Strategic Choice Model of Political Change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24 (January): 229-234.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Juan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eds.)

1990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y*. Boulder: Lynne Rienner.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ibson, James, Raymond Duch, and Kent Tedin

1992 "Democratic Values and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Journal of Politics* 54: 329-371.

Higley, John, and Richard Gunther (eds.)

1992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December): 1028-1034.

Levine, Daniel H.

1988 "Paradigm Lost: Dependence to Democracy," *World Politics* 35 (April): 377-394.

Mainwaring, Scott

- 1992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in S.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Press, 295-302.

McDonough, Peter, Sameul Barnes, and Antonio Lopez Pina

- 1986 "The Growth of Democratic Legitimacy in Spa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September): 735-760.

Moore, Barrington, Jr.

- 1966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O'Donnell, Guillermo

-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17-56.

O'Donnell, G., and Philippe Schmitter

-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Donnell, G., P.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4 vol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owell, G. Bingham, Jr.

- 1982 *Contemporary Democrac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dam

-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pp. 47-63.

- 1992 "The Games of Transition,"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pp. 105-152.

Schumpeter, Joseph A.

-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Shin, Doh Chull

- 1993 "On the Global Wave of Democratization: A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2nd Conference on Democratization and Official Assistance, Tokyo, Japan, March p. 23.

Shin, D.C., and Myung Chey

1992 "The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Mass 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atterns and Meaning of Democrat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November 20-21, 1992

Valenzuela, J. Samuel

1992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ost-Transitional Settings: Notion, Proces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 Mainwaring, O'Donnell, and Valenzuela,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57-73.